

‘法’으로 종교편향 방지

강창일 의원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제출...정부여당도 ‘긍정적’

불교계가 종교차별에 반발하며 8월 27일 범불교대회에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에서 제출했다.

국회 정각회 부회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월 14일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차별적 조치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대통령이 종교 편향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종교편향과 차별이 있을 경우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했고,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의자는 강창일 의원, 강기정 의원, 박선숙 의원 등 11명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7월 30일 공무원의 정책과 법령 집행 과정에서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민주당 대표 정세균 의원(사진) 등 민주당 지도부가 8월 21일 조계사에서 ‘종교 편향 반대’ 단식시위중인 스님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된 직무 수행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 절차 명문화, 피해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과 관련한 각 정당의 입법조치에 대해 조계종에서는 개정안에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조항이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무원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국가공무원

법’ 이외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에도 ‘종교 중립’ 조항을 반영하고, 관련 종교차별금지법에 징계조항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등 여권은 불교계가 종교차별 방지를 위해 요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최근 관련 수습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종교차별 방지 입법화와 관련, 한나라당이 주도해 현행 정부조직법이나 공무원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교회 투표소 안된다”

종교평화위 성명, 관련 사례 취합

“선관위는 다른 종교를 믿는 국민들을 배려해 교회투표소를 배제하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는 8월 19일 중앙선관위에 “종교시설투표소 설치·운영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문과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선관위에 시정요청을 했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 특정종교시설투표소에서 선교회와 상징물이 그대로 들어간 등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했다”며 “관련자를 문책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식사과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이어 “선관위에 자료제공 및 시정요청을 했으나, 서울시교육감 선거시 교회투표소가 2,189개소 중 397개(18.1%)에 달

하는 등 조치내용이 변함이 없다”면서 “선관위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인 우리 사회를 인정해 아담하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제 147조 2항에 의거해 종교시설투표소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종교자유를 규정한 헌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에 서도 특정종교시설투표소가 유권자 인권을 침해하므로 시정 권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종교평화위원회는 향후 조계종 지역신도회와 연계해 각 지역 종교시설투표소 설치·운영에서의 종교편향 사례를 취합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불전함에 ‘예수천국’ 헌금봉투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자는 지옥, 아멘!”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종교간 화합과 평화가 요구되는 때, 조계사(주지 세민) 불전함에 길거리 팻말에서나 볼 수 있던 선교용 문구가 적힌 1000원권 헌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8월 20일 발견된 헌금은 ‘십일조 헌금’ ‘세계선교 헌금’ ‘간혹 헌금’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건축 헌금’ 등 5개 봉투에 1000원씩 담겨 있었다.

조계사 이세용 총무과장은 “선교용 문구가 적힌 1000원권이 간혹 보이기는 했지만, 무더



기로 헌금 봉투에 담겨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광신도들의 조계사 출입이 확인된 이상 경비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지리정보 사찰 누락 ‘종교 코드 과잉 총성’?

최근 국토부와 교과부의 사찰정보 누락으로 종교편향 파문을 일으

킨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이 수주를 따기 위해 종교코드로 과잉총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8월 22일 “국토부 ‘알고거’, 교육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서울시 ‘GIS서비스’ 등을 제작한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급성장한 중견업체로 사찰누락도 수주를 따기 위한 과잉총성”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종교편향 반대하는 말 말 말 ...

정부의 거듭된 종교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클름 드높다.

2008년 6월 국토해양부가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사찰 표기를 누락한 일명 ‘알고거’ 사건으로 표면화된 종교편향 시비에 불교계는 일관되게 ▲책임자 문책 ▲공개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종교편향에 대처해 불교계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

▲“불교의 사람과 상징물을 제외한 것은 분명 누군가의 지시와 감독이 수반된 일.”

— “1700년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없애버린 대중교통이 용정보시스템 ‘알고거’는 즉각 개편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하라” 조계종 중앙신도회·종교평화위원회(6월 23일)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마저 강그리 무시하고 특정세력 이익을 위해 정부 본래 기능과 의무를 팽개친 사건.”

—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정부인가?” 조계종 자정청정 실천운동본부(6월 25일)

▲“어청수 경찰청장의 종교편향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종교적 코드정치 결과.”

—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적 코드 정치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특정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6월 28일)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진심으로 화합할 때 국민의 화합이 가능하다.”

— “평화집회 보장하고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강원·충청·호남지역 본말사주지스님들(7월 14일)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검문검색은 행정부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 “이명박 정부의 불교모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7월 29일)

▲“경찰이 총무원장을 검색한 것은 이명박 장로와 그 하수인인 어청수 경찰청장이 합작해 저지른 죄수.”

—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불교연석회의(7월 30일)

▲“총무원장스님이 출타한다고 경찰에 이미 통보한 뒤에 벌어진 일하기에 더욱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 “권력의 주구가 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조계종 총무원조합 위원회(7월 30일)

▲“불자들은 7월 29일을 ‘교단치육일’로 기록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 “정부의 불교모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7월 31일)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불교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불교인권위원회(8월 4일)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길 없이 식별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

— “이명박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교간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재가불자 식발 성명(8월 6일)

▲“불심검문은 2000만 불자를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을 범죄자 취급한 것”

— “불교계는 연이은 불교편향과 종교 갈등 속에 시달려왔다” 조계사신도회 성명(8월 7일)

▲“요즘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방해한다지만 우리는 상대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욕하거나 때려도 묵인 대처하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하안거 해제법어(8월 15일)

▲“내 종교에 대한 신념과 타종교에 대한 존경심 발현돼야 사회평화 보장된다.”

— “2008 한국 교수불자대회 결의문” 한국교수불자대회 동참자 일동(8월 20일)

조동섭 기자

이웃종교·일반언론도 “종교차별 반대”

종교편향 종식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 화두는 불교계를 넘어 타종교와 언론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원불교청년회, 한국기독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등 9개 단체들은 8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편향종식과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웃종교 청년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종교편향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종교편향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와 종교에 의해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한 범사회적합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 7개 일

기독교청년회 성명 발표...일간지·방송도 관심

간지도 사실에서 종교차별 금지와 입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MBC, SBS 등 주요 방송도 종교차별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왜 이 정권에선 종교 편향 논란이 계속되는가’라는 8월 11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종교를 이유로 해택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하고, 종교들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교,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12일 ‘이런 상황이라면, 종교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사설을 통해 “헌법 이외에 종교차

별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두는 건 문명국가로서 창피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차별적 발상과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체면을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이로봇이** 안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iN 마이로봇

대한민국 전 불교도에게 드리는 글, 건 백 서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7부 대중 여러분!!!

1. 대한민국의 전 불교도는 절대로 중국 법원사 고심율사 울맥으로 재가계(삼귀의계, 오계, 보살계)나 출가계(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비구, 비구니)를 수지(계를 받아 지님)해서는 안됩니다.
2. 대한민국의 전 불교도는 조선불교 지리산 동국제일선원 중흥율사상계 대은율사의 울맥으로 재가나 출가계를 전수하거나 수지(계를 받아지님)해야만 합니다.
3. 만약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법원사 고심율사의 서상계 울맥으로 재가나 출가계를 주거나 받아 지녔다면 지심으로 참회하고 다시 조선불교 중흥율 대은율사의 울맥으로 재가계나 출가계를 수계해야만 합니다.

3.1 독립운동 정신과 학생독립운동의 정신계승과 국토수호차원에서,

▷ 이 유 ◁

1. 법원사는 중국 북평 선무원 밖에 있는 절로써 본시 민중사라는 절입니다. 당정관 19년(AD645년)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 당시 고구려 안시성 전투에서 대패한 후 고구려에서 전사한 당나라 군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는 서원으로 세운 절로써 서기 1734년 법원사로 개명한 절이니 불교의 계율사상과는 배치되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중국 법원사의 고심율사도 서상계로 울맥을 이었고 조선불교 동국제일선원대은율사도 서상계입니다.
3. 같은 서상계맥 이라면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자 세운 저 법원사의 울맥으로 계를 주고 받아야 합니까?

따라서 조선불교 중흥율사상계 대은율사의 울맥으로 전계도 하고 수지도 해야만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화복전 삼천삼십오년(戊子)夏 해제일
용성문인 조선불교 중흥율 제8세
국토수호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 태화 석가산 계수화남